

## 군사보호구역 풀고 취·등록세 중과 폐지까지

# “수도권 공화국” 반발

###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기업환경 개선’ 저지 운동

정부가 1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47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신규 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폐지,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등 핵심이 ‘수도권규제 완화’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2·11면〉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수도권 신설법인 취·등록세 중과제도가 35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km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km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기관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받았던 경기도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 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10년 동안 3

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중에는 부천·남양주 등 수도권에만 230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기존의 지방기업까지도 수도권을 옮겨갈 가능성이 크며, 수도권 발전을 위해 지방경제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대책이 수도권 규제 전면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결국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자립 기반 약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의원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던 지방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광창된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경·채희종기자 jkpark@



### 목포 ‘성 미카엘 대성당’ 성공 건립 축복식

오는 2010년 완공되는 ‘성 미카엘 대성당’의 성공 건립을 위한 축복식이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 집전으로 11일 오전 목포시 산정동 옛 골굴반 병원터에서 열렸다. 허재호 대주교를 회장이 사재 300억원을 봉헌한 ‘성 미카엘 대성당’은 국내 성당 가운데 최대 규모로 1만3천663㎡ 부지에 1천500석의 대성전을 비롯해 사제관, 교육관, 수녀원, 가톨릭 역사박물관 등 7개 건물과 목포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70m 높이의 상징 타워가 세워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회 정상화 정치권 분주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촉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기사 5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13일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간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쇄고기 파동으로 공전해온 18대 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야권은 이러한 접촉들을 통해 한나라당에 가축법 개정안을 수용토록 압박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13·14·15일... 계속되는 촛불

### 대책위 20일까지 통첩 ... 국정쇄신안이 ‘분수령’

6월 항쟁 21주년인 10일 ‘최고기정국’ 사상 최대 규모 인파가 참가한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이어, 오는 13, 14일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획돼있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안 내용도 최종기 민심 수습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위’가 오는 20일을 시한으로 정부의 재협상 결단을 압박하고 있어 이달 중순이 사태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100만 촛불 대행진’을 주도했던 ‘광우병 국민대책위’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 고(故) 효순·미선 양의 6주기인 13일 추모 행사와 함께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토요일인 14일에는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다가 숨진 고 이병렬(43)씨의 영결식을 서울시청 앞 광장

에서 ‘민주시민장’으로 진행한 뒤 이후에는 이씨를 추모하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연다. 일요일인 15일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통일단체와 재야단체 등이 주최하는 각종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가 오는 20일 까지 정부가 쇄고기 협상 무효화 및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어 다음주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 다시 촛불이 거세게 타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오는 13일~14일 이틀 동안 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등 20여명은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촛불집회 향후 일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13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고 효순·미선 양의 6주기 추모행사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주말인 14일에는 미국산 쇄고기수입 반대 집회에서 분신했다가 숨진 고 이병렬씨의 추모식과 함께 복구 운동등 옛 망월역에 시신을 안장한 뒤 대규모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미룬다

### 黨政, 민생안전 집중

여권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을 뒤로 미루고,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기조를 대대적으로 쇄신한다. 〈관련 기사 4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우선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대운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

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국가 현안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당정이 모여서 한번 정책의 운용 시기, 정책의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큰 선에서 결정을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서 “지금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바쁘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도 당정 전반에 관해서도 “이제 여권이 정책 역량을 고유가·고물가·최고기 파동 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집중시키고, 논란이 됐던 한반도 대운하나 공공부문 개혁 등은 후 순위 과제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공기업 민영화 등은 한동안 후 순위로 밀리면서 추진 동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가 늦어지거나, 폐기되면 혁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국에 공기업 민영화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추진되기는 무리”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들은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민생 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일학원 장학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